



いまこそ高等教育を無償へ——海外動向から学ぶ

渡部, 昭男 ; 光本, 滋 ; 岡山, 茂 ; 石井, 拓児 ; 横山, 岳紀 ; 多胡(尹), 太佑 ; 梁, 洙京

(Citation)

日本教育学会第 82 回大会

(Issue Date)

2023-08-24

(Resource Type)

conference object

(Version)

Version of Record

(URL)

<https://hdl.handle.net/20.500.14094/0100482898>



지금이야말로 고등 교육 무상으로 —해외 동향으로부터 배운다—

기획자·사회자 : 와타나베 아키오(渡部 昭男, 오사카 세이헤이 대학) 미쓰모토 시게루(光本 滋, 홋카이도 대학)

보고자 : ○오카야마 시게루(岡山 茂, 早稲田大学) ○이시이 타쿠지(石井 拓児, 나고야 대학)

○요코야마 다카노리(横山 岳紀, 나고야 대학·대학원) ○타고(윤) 타이스케(多胡[尹] 太佑, 홋카이도 대학·대학원)

2022 년은 일본이 국제 인권 A 규약 13 조 「교육에의 권리」 2 항(b) 중등 교육·(c) 고등 교육의 「무상 교육 점진적 도입」 조항과 관련된 유보를 철회하고 점진적 무상화로 나아가겠다고 국제적으로 공약한 지 10 년이 되는 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일본 정부의 고등 교육 무상화 행보는 지지부진했고, 소비 증세 2%분에 대한 용도 변경에 따라 저소득층에 한정된 대학 등 수학 지원 신제도(학비 감면+급부 장학금)를 출범시켰을 뿐이다(2020 봄). 국회 부대 결의는 점진적 무상화 실현을 위한 재원 확보와 추가적인 대응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3 년은 그 실시 후 4 년 경과에 따른 재검토 시기이다. 정부 측은 현재, ①이공 농학계와 3 인 이상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중산층(연봉 상한 600 만엔 기준)까지 확대하는 방안, ②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등록금 후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수익 후불제 도입 등을 논의하고 있다. 바로 지금, 어떤 문제 제기·개선에 대한 제안이 가능한지 본 학회에도 문의 되어지고 있다. 공교롭게도 제 82 회 대회 공동 개최교인 도쿄 도립 대학에서는 2024 년도부터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담한 학비 무상화 방안(4 년간 약 209 만엔의 등록금 감면 대상을 세대 수입 478 만엔 미만에서 단번에 910 만엔 미만으로 확대)을 예정하고 있다고 한다. 본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잡지 『경제』 2022. 10 월호 「특집:지금이야말로 고등 교육 무상으로」 에 수록된 여러 논고를 공유 재산으로 하며, 프랑스·EU·유엔 SDGs, 미·독·한국의 동향에 대한 화제를 제공받아, 해외 동향으로부터 배우며 고등 교육 무상화 논의를 심화시키고 싶다.

1. 프랑스 EU 유엔 SDGs: 오카야마 시게루(岡山 茂) 「학비를 끊자! 무상과 해방의 고등 교육을 위하여」

나폴레옹이 만든 「제국 대학」은 유상이었다. 그러나 해체된 뒤 부활한 15 개 대학도 유상이었다. 정치인들은 대학 무상화보다 소르본느(파리대)의 훌륭한 건물을 지어 제국의 위신을 높이는 것을 우선시한 것이다. 고등 교육까지 포함한 모든 수준의 교육 무상화가 국가의 의무가 된 것은, 1946 년에 불과하다. 이 이상은 유엔이나 EU 에 의해서도 공유된다. 그러나 지금 프랑스에서는 EU 권 외의 학생에 대한 무상화가 폐지되고(박사 과정 제외), 기사 학교 등에서는 유상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랜드 제콜에는 엄격한 입시가 있고 대학을 졸업하기도 쉽지 않다(따라서 중퇴자가 많다). 지금 무상화를 물을 때 필요한 것은 그보다 선행하는 이상(모든 사람을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구속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을 잃지 않는 것이다. 「제국적 사회」(크리스토프 샤를)는, 보드레일, 프로베르, 쿠르베, 마네 등에 의한 「상징 혁명」(피에르 부르뒤)과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프랑스, EU, 유엔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서는 ACIDES 라는 교원 그룹의 무상화에 더해

학생 연금 혹은 베이직 인컴을 도입하자는 의견(2015년)을 소개한다.

2. 미국: 이시이 타쿠지(石井 拓児) 「등록금 무상화와 고등 교육을 받을 권리를 둘러싼 이론 동향」

흔한 오해는 미국의 대학 등록금이 고액이라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대학 등록금이 「매장 표시 가격(Sticker Price)」으로 표시됨에 따라 발생하는 오해로, 「실제 등록금」은 상환 불필요한 다양한 장학금, 대학이 독자적으로 실시하는 할인 조치, 교과서 급부나 식사·주택 급부 등을 조합해 결정된다. 이것을 Net Tuition(순 등록금)이라고 한다. 미국에서는 펠 장학금이라고 불리는 연방 정부가 운영하는 장학금 제도가 존재하고, 나아가 주 차원에서도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가 취해져(프로미스 프로그램), 많은 주립 대학에서 등록금은 실질 무상화되고 있는 것이 현 단계로서 확인되어진다. 더불어 주목할 만한 동향으로 지난해 2022년 8월, 바이든 대통령이 장학금 상환 일부를 연방 정부가 대납하는 정책 도입을 표명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최근 미국의 고등 교육 수업료를 둘러싼 정책적 동향의 배경에는, 고등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을 둘러싼 논의의 진전을 볼 수 있다. 본 보고에서는, 몇몇 주에서의 프로미스 프로그램 정책이나 장학금 변제 탕감 정책의 도입 경과를 분석해, 고등 교육을 받을 권리와 그 권리 보장으로서의 등록금 무상 조치와의 관계가 어떻게 인식(합의)되었는지 검증한다.

3. 독일: 요코야마 타케(横山 岳紀) 「등록금 도입부터 폐지로: 21세기 독일에서의 전개」

독일의 주립 고등 교육 기관은 현재 원칙적으로 등록금은 무료다. 그러나 특히 21세기로 들어서며 등록금 무상은 개혁의 파도에 노출되어 왔다. 먼저 독일은 16주로 구성되어진 연방제 국가로서, 교육에 대한 권리는 원칙적으로 각 주에 있다(문화 고권, 文化高權). 1960년대까지는 수업료가 면제되었지만 단계적으로 폐지되어 오랫동안 무상 시대가 이어졌다. 이후 1990년대에 들어서며 공재정의 핍박으로 장기 재학자에 대해 등록금을 징수하는 주가 나타났다. 이에 대해 당시 연방 정부 여당인 사회민주당(SPD)은 2002년 고등 교육 대강법에서 등록금 무상을 규정했으나, 이 조항이 연방 헌법 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되면서 일부 주에서 다시 등록금 도입이 추진됐다. 그러나 학생들의 항의 활동과 고등 교육 등록금 무상화를 내세우는 SPD가 각지의 주의회 선거에서 정권을 탈취하면서, 2013년 니더작센주(Land Niedersachsen)가 등록금 폐지를 결정함에 따라, 첫번째 학위 취득까지는 모든 주에서 무상이 됐다. 단, 장기 재학자나 비 EU 권 재학생 등에게 등록금을 부과하는 주도 볼 수 있지만 여전히 예외적이다. 이와 같이 공재정의 핍박을 겪으면서도 등록금 무상을 계속하는 독일의 사례를 참작함으로써 일본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4. 한국: 다호 [윤] 태우(多胡[尹] 太佑) 「등록금 반값화로의 2012년 패러다임 전환의 빛과 그림자」

지난 10년간 한국에서는 고등 교육의 학비 부담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 2011년까지 학생 지원 예산을 줄였던 정부·여당은 2012년부터 국가 장학금 제도를 마련해 예산을 대폭 확충했다. 그 후 10년간, 국가 장학금 제도 예산은 계속 확충되고, 수업료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그 변화의 방아쇠가 된 것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행해진 전국적인 학생·시민

운동이었다. 이를 계기로 한국 사회에서는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난 것처럼 보였다. 확실히 과거 10 년간의 학비에 대한 국회에서의 논의를 보면, 여야를 불문하고, 학비 부담이 무겁다는 문제 인식 아래, 학생 지원을 늘리는 것이 지지되어 왔다. 그러나 이는 권리 보장보다는 선거를 의식한 것이어서 학생의 실질 부담은 줄었지만 대학원생 및 외국인 학생의 학비는 상승했다. 또 여론은 사립대에 대한 공적 재정 투입에는 부정적이어서 공재정 비율 확충, 등록금 인하는 이뤄지지 않아 부담 경감의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았다. 근본적인 문제는, 2012 년의 전환이 공공성에 관한 의식의 전환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 한계는 대학의 재정위기와 경쟁력 저하라는 과제를 낳았고, 현재 한국은 개인 부담을 다시 늘릴 것인지, 사학에 재정 투입해 공공성을 강화할지에 대해 선택해야 한다.